

# 육아정책, 새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을 기대한다

우남희 소장

**지난** 5월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비전을 내걸고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로 출범 초반 대통령 지지율은 80%에 가깝게 높게 나타났다.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와 함께 새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지표의 현실과 전망은 밝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은 여전히 지속되는 추세로 육아정책의 대상이며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동이 실제 감소하고 있고, 국가 주도로 추진하였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도 미완결된 상태로 남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나아가 아동의 생애초기 경험의 격차 문제가 여전하다.

10년 동안 약 80조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출산율은 전년도 기준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2017년 상반기까지 합계출산율은 0.555명으로 이런 추세면 2017 출산율은 연간 1.1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서울경제 2017. 8.30일자)”

지난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노력을 하였으나, 오랫동안 누적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입장 차이와 통합 방향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만을 남겨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국정전략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책임성을 가지고 육아정책을 추진하고 공공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국정과제에 0-5세 아동수당,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기관 40% 확대와 유보 격차 완화가 포

함됨으로써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존중되는 정책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어떤 한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처의 과제로 녹아 들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으로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렵고 관계부처 간 목적의 공유 속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통한 추진이 가능할 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육아정책의 특징을 현 정부가 잘 간파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과제로 추진될 경우 책임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추진력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육아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20여개가 넘고 주관 부처도 다양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도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적으로 얽혀있는 현실 상황을 재확인하게 되며, 향후 5년간 정부가 육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 갈등도 넘어서야 함을 깨닫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숙제들을 해결하고 국정과제가 내실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행복한 성장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다. 공들여 선정한 국정과제가 영유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육아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새정부가 진실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